2021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1. 1.

해양수산부

목 차

Ⅰ. 4년 추진성과와 평가 ····· 1

Ⅱ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····· 6

Ⅲ. 2021년 해양수산부 핵심 추진과제 ····· 8

1. 수출물류 지원, 차질없는 해운재건 ····· 9

2. 수산·어촌 활력 회복, 연안경제권 균형발전 ····· 12

3.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····· 15

4.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과 혁신산업 성장 ····· 19

5.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 ····· 22

Ⅳ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····· 25

[붙임] 4년간 성과/21년 계획 관련 체감사례 ····· 26

Ⅰ. 4년 추진성과와 평가

1 해운재건의 가시적 성과 창출

□ 추진실적

❶ **(해운재건 계획)** 한진해운 파산('17.2)으로 추락한 **해운 재건**을 위해 **「5개년 계획」** 수립('18.4), **한국해양진흥공사*** 설립('18.7)으로 **총력 지원**

* 선박금융(S&LB) 등의 방식으로 **80개 해운기업**의 자산 확보, 경영 안정 등에 **5.2조원** 지원

❷ **(선복량 확충)** 초대형 '컨'선 20척(2.4만TEU급 12척, 1.6만TEU급 8척) 등 **총 187척**의 **신조** 및 노후선박 **대체건조 발주**('18~'20)

- 알헤시라스호 등 **2.4만TEU급 세계 최대 '컨'선 12척**은 **유럽항로**에 **조기 투입**하여 24항차 연속 만선 출항('20.4~12)

❸ **(선사·항만 경쟁력 강화)** HMM은 THE Alliance(3대 해운동맹) **가입** 및 **협력 개시** ('20.4~), **아시아 '컨'선사**는 **항로 구조조정** 등* 경쟁력 강화 지원

* 항로 구조조정('17~'18, 3회), 한국해운연합(KSP) 구성('18), 장금상선·흥아해운 통합법인 출범('19)

- **우수 선화주 인증제*** 등 선사의 **안정적 화물확보**를 지원하고, 부산항·광양항 등 **거점항만**의 **인프라 지속 확충** 및 **중장기 발전전략 마련****

* 6개사 선정('20.11) → 세제 등 지원 / **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('19),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('20)

□ 정책효과

❶ **(해운 매출액 등 회복)** 해운재건 계획 실행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**해운산업 경쟁력**(매출액 등) **회복** 및 해운-조선 상생 추진

< 구 분 >	한진사태 전		한진사태 후		'20년(추정)
해운 매출액(조원)	39조원('15)	☞	29조원('16)	☞	36조원
원양 선복량(TEU)	105만TEU('16.8)		46만TEU('16.12)		78만TEU
지배선대(DWT)	8,535만('16)		7,994만('17)		9,030만

- 대표 국적선사인 **HMM 영업이익**도 **21분기 만에 흑자 전환**('20.2분기)

❷ **(수출입물류 지원)** 부산항은 **세계 2위 환적 허브항만**('컨' 처리 기준 세계 6위*)으로, **광양항**은 **세계 11위** 종합물류항만**으로 성장

* '컨' 환적물량 1,164만TEU('19년, '컨' 처리물량의 53%) / ** 세계 11번째 年 물동량 3억톤 돌파('18년)

- 해운재건 성과를 바탕으로, **중소·중견화주**의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해 **임시선박**(9척) **투입**, **정기운항선박 선적공간** 등 지원('20.8~12)

2 수산업 혁신 및 연안·어촌 활력 제고

□ 추진실적

❶ **(수산혁신 계획)** 생산·유통·가공·어촌 등 수산업 분야별 전주기 혁신을 위해 **「수산혁신 2030 계획」*** 수립('19.2) 및 실행

* 자원관리형 어업 정착, 친환경 양식 육성, 유통·가공 시스템 혁신,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

❷ **(친환경 생산) 어선 감척**(1,187척), **TAC**(총허용어획량) **확대**(12→15종(시범포함)), **불법어업 단속**, **「양식산업법」*** 제정('19), **안전성 조사 강화**(6.3만건) 등 어업 친환경화

* 면허심사·평가제(어장환경관리 등) 도입, 양식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추진 등

❸ **(유통·가공 혁신) 유통혁신로드맵**('18.6)·**新수출전략**('19.3) 수립 및 **「수산식품산업법」**·「김산업법」 제정('20), **친환경 유통·가공시설*** 조성

* 유통시설 6개소(산지거점유통센터, 소비지물류센터 등), 가공시설 4개소(수산식품거점단지) 조성

❹ **(어촌 정주여건 개선) 어촌뉴딜 300*** 신규 추진**('18~), **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**** · **수산공익직불제 도입**('20) 등 생활SOC, 소득기반 확충

* 대상지 선정 : ('19) 70개소 → ('20) 120개소 → ('21) 60개소 → ('22) 50개소
** (종전) 어업·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 → (개선) 8천만원(어업 5천만원, 양식 3천만원)까지 비과세

❺ **(연안경제 활성화)** 중장기 전략 및 제도 마련*, 인프라 조성** 등을 통해 **항만 재개발** 및 **해양·어촌관광** 활성화 추진

*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('20.12), 해양관광 활성화대책('19.5), 「항만재개발법」·「해양치유법」('20.1)
** 부산 북항, 인천 영종도 등 재개발, 해양레저관광거점(5개소)·치유센터(4)·어촌테마마을(7) 조성 등

□ 정책효과

❶ **(수산식품 경쟁력 향상)** 수산물 생산·유통·가공의 친환경·고부가가치화, K-FISH 마케팅 지원으로 **연간 23억불 이상 수출**실적 달성*

* 총 수출액/김 수출액(억불) : ('17) 23.3/5.1 → ('18) 23.8/5.3 → ('19) **25.1**(역대최고)/5.8 → ('20) 23.2/**6.0**(역대최고)

❷ **(수산물 안전·중국어선 조업감축)** 친환경·자원관리형 수산정책을 기반으로 **WTO 對일본 수산물 분쟁 승소**('19.4), **중국어선 입어규모 감축***

* 中어선 입어 : ('16) 1,600 → ('20) 1,400척 / 中어선 불법조업 : ('16) 405 → ('19) 195척

❸ **(연안·어촌 활력 제고)**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, 노후 항만의 재개발, 해양·어촌관광 활성화*로 연안·어촌 지역의 활력제고에 기여

* 연간 해양관광객수 : ('17) 11백만명 → ('18) 14백만명 → ('19) 18백만명

3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기틀 마련

□ 추진실적

❶ (선박·항만 친환경화) **「친환경선박법」**('18.12)·**「항만대기질법」**('19.4) 제정, **2030 그린쉽-K 추진전략**('20.12) 수립 등 선박·항만 친환경 전환* 추진

*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(3.5→0.5%), 배출규제해역 지정, 선박·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등

❷ (해양플라스틱 저감) **종합대책** 수립('19.5), **「해양폐기물법」** 제정('19.12)*, **친환경 부표** 보급(477만개) 등 全주기(발생-수거-처리) 관리체계 마련

* (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) '18년 현존량(11.8만톤) 대비 '22년 30%, '30년 50% 저감
(해양폐기물관리법)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, 하천관리청의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 등

❸ (해양공간 이용 합리화) **「해양공간계획법」** 제정('18.4) 및 기본·관리계획 수립('19.7~), 해양환경·어업인 - **바다모래·해상풍력** 간 **상생방안*** 수립

* 골재수급 안정대책(해수부·국토부, '17.12), 해상풍력 상생·발전방안(해수부·산업부, '20.7)

❹ (해양생태계 관리) **해양보호구역 확대**(576→1,784㎢), **「갯벌법」 제정** ('19.1) 및 갯벌 복원 추진, **해양생태축*** 구축방안 마련('20.8)

*「해양생태계법」 개정('20.12)으로 해양생태축 설정·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

□ 정책효과

❶ (해양환경 녹색복원) **항만 미세먼지 저감***, **해양쓰레기 수거 확대**** 등을 통해 해양환경의 녹색복원 촉진

* 계절관리제('19.12~'20.3) 기간 중 주요 항만도시의 전년대비 미세먼지 농도 변화(㎍/㎥)
: (부산) 28 → 21(△28%), (인천) 32 → 24(△25%), (울산) 25 → 19(△24%)

** 해양쓰레기 수거량(만톤) : ('16) 7.1 → ('17) 8.2 → ('18) 9.6 → ('19) 10.9 → ('20) 13.3(잠정)

❷ (해양공간의 상생·공존) **先계획-後이용 관리체계, 해양개발-보존 상생모델*** 등 해양공간의 상생·공존 및 갈등 관리체계 구축

* 남해 EEZ, 서해 EEZ 등 친환경적 바다모래 채취 재개,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

❸ (해양생태계 보전)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 복원 확대, 해양생태축 제도 도입으로 **해양생태계의 다양성 증진 및 통합관리** 기반 마련

4 해양안전 관리 선진화

□ 추진실적

❶ (안전제도 강화) **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정**('19.8) 및 **「낚시관리법」** 개정('19~'20), **위험물선박** 제도 개선('20.12) 등으로 선박사고 예방 강화

* (어선) 기상특보시 출항제한·위치보고 강화, 기상악화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(낚시어선) 안전요원 승선(13인 이상, 야간항해), 선장자격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등 (위험물선박)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 대상 방폭장비 확대 등

❷ (안전조직·인력 보강) **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**('19.7, 선박안전공단 확대), **어선안전정책과**('20.3) 등 안전관리조직 신설·강화

- 연안여객선 **운항관리자 증원**(106→142명), **국민안전감독관** 운영(年 15명)

❸ (안전장비 보급·개발) 어선 화재사고 예방·저감을 위해 **화재탐지 경보장치 1만 5천척**에 **보급**('19~'20) 및 **육상용 소화기 사용 허가**('20.1)

-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**어선 위치확인시스템, 표준어선형** 개발('20)

❹ (안전문화 확산) 여름철 **해양안전체험장** 운영('18~'20, 워터파크 등), **해양안전체험관**(안산) 및 **국민해양안전관**(진도) 건립 추진('18~)

❺ (디지털 해양교통관리)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,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(S-100) 기반의 **바다 내비게이션***(e-Nav) 시스템을 **세계 최초 구축**('20)

* 충돌·좌초경보 제공, 최적항로 안내, 기상정보 제공 등

□ 정책효과

❶ (해양사고 피해감소) 안전제도·관리 개선을 통해 종전 4년간('13~'16) 대비 최근 4년간('17~'20) 사망·실종 등 **인명피해 40% 감소**(786→469(잠정)명)

❷ (안전의식 고취) 여름철 해양안전체험장 운영(1만3천명 교육) 등을 통해 **안전한 바다활동** 필수교육을 제공하여 **해양안전 국민의식 향상***

* 일반국민 해양안전수칙 준수도(1천명 설문, 100점) : ('18) 75.0점 → ('20) 83.4점(11%↑)

❸ (디지털 해양안전관리) 바다 내비게이션, 어선 위치확인시스템 등 **디지털 안전관리 기반**을 마련하고, **독도·동해 영토주권 확립***에 **기여**

* 제2차 국제수로기구(IHO) 총회('20.11)에서 기존 해도표준(S-23, 일본해 표기)을 대체하는 디지털 해도표준(S-130,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해역 표기) 개발 결정 → S-100 기반 주도권 강화

5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적극 대응

□ 추진실적

❶ **(코로나 방역·업계지원)** 승선진단검사,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(5개소) 등 **항만 방역**을 **중점 추진**하고, **해수욕장**은 **ICT 기반 방역관리*** 실시

* 혼잡도 신호등(KT 등 협업), 사전 예약제, 한적한 해수욕장 적극 홍보 등

- 해양수산 **업계**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운·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총 **2.53조원** 규모의 **지원대책**(총 8회)*을 통해 **경영안정 지원**

* (해운) 총 4회, 1.7조원 규모(1조원 집행) / (수산) 총 4회, 0.83조원 규모(0.8조원 집행)

❷ **(포스트 코로나 대비)** 코로나19 이전부터 **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**('19.11), **신산업 혁신전략**('19.10) 등*을 통해 해양수산업 **혁신성장 추진**

* (분야별 전략) 아쿠아팜 4.0 추진방안('19.9),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('20.2) 등

- 범부처 "**한국판 뉴딜 종합계획**('20.7.14)"에 해양수산 분야 **디지털·그린 전환**을 위한 **핵심과제**를 **집중 반영**

디지털 뉴딜	자율운항선박(R&D),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, 항만·어항 디지털 관리체계, 스마트 공동물류센터(항만 배후단지), 수출입물류 디지털 관리 플랫폼, 스마트 양식클러스터,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, 청정어장 등
그린 뉴딜	해수부 관공선 109척 친환경 전환, 민간선박 친환경 전환 보조, 친환경 선박기술 R&D 및 제도개선, 갯벌 복원, 침적쓰레기 수거, 친환경 부표 보급, 해양생태축 설정·관리, CCUS 통합실증 및 상용화(R&D) 등

-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, 디지털·그린 전환,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 등 **포스트 코로나 대응**을 위한 **종합전략 수립** 및 **제도개선***

* 해양수산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('20.7) 수립, 「항만법」 개정('20.12, 유턴기업 지원) 등

□ 정책효과

❶ **(코로나 방역·업계지원)** 적극적인 항만 방역관리로 **중단없는 수출입 해상물류**를 실현하고, **해수욕장**은 **코로나 감염 제로** 달성

-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영지원으로 해양수산업계의 **긴급한 유동성 애로 해소, 1,500억원 이상 수산물 소비촉진** 등 피해 최소화에 기여

❷ **(포스트 코로나 대비)** 창업투자, R&D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디지털·그린·바이오 등 **혁신산업 분야 유망기업**의 **창업·성장 촉진***

* 해양수산 창업·투자 지원으로 118개사 창업, 891억원 투자 유치, 4,818명 신규 고용 창출

- **포스트 코로나** 시대 해양수산업의 **경쟁력 혁신**을 위한 **기틀 마련**

Ⅱ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

□ 경기 대응 측면

○ '21년 경제 회복이 전망되나, 코로나19 불확실성 존재

- '20년 역성장(△1.1%)에서 벗어나, **'21년 약 3.0% 성장**(IMF·한은 등)이 전망되나, **코로나19 상황** 등에 따른 **불확실성** 존재

○ 경기 반등 정책과 함께, 지역균형발전 및 안전망 구축 필요

- 코로나 방역과 함께 **내수**(소비·투자) 및 **수출 회복**을 통한 확실한 경기 반등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회복 정책 시급

- 경기 부양 효과의 특정 지역·계층에 편중과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**지역균형발전** 및 취약계층에 대한 **안전망 구축**도 절실

□ 산업구조 전환 측면

○ 탄소중립과 脫플라스틱을 위한 국가적 노력 요구
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**'50년 탄소중립**(Net-Zero) 추진에 대해 **세계 각국***이 **공감대** 형성, **대응전략 수립** 중으로, 우리도 동참 필요

* (美) 바이든 정부 친환경 인프라에 4년간 2조불 투자 / (EU) '50년 넷제로 목표로 그린딜 추진

-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**플라스틱 폐기물***로 육상과 해양 환경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**국가적 감축노력** 요구

* 전년 대비 택배 19.8%↑, 음식배달 75.1%↑ → 폐플라스틱 14.6%↑, 폐비닐 11%↑

○ 선제적 디지털 전환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좌우

-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**디지털 융합**을 통해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, **새로운 성장동력**을 창출·활용하여 미래 경쟁력 확보 필요

- 특히, 코로나19 계기 **비대면·온라인 경제**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산업의 **디지털 전환**을 요구하고 있어 대응체계 구축 가속화 시급

2 업무추진 방향

□ 해양수산의 경기 뒷받침 역할 강화

○ **(해운)** 수출 회복을 통한 **경기반등 뒷받침**을 위해 선적공간 제공 등 **수출기업**의 **물류애로 해소 지원**을 **강화**

- 국적선사 혁신, 해양진흥공사 지원 확대 등 **해운재건도 차질없이 이행**

○ **(수산) 소비촉진** 및 **수출지원, 연근해 수산자원관리, 친환경 양식** 육성 등으로 수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 가속화

- **어촌·도서지역 정주여건 혁신, 항만재개발, 해양관광·문화 인프라** 조기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소멸 예방

□ 지속가능한 선도형 해양수산 실현

○ **(탄소중립·플라스틱 제로화)** 해양수산 분야의 **脫탄소화** 및 **탄소 흡수원 확보**, 해수면·해수온 변동 등에 대한 **적응력 향상** 추진

- 해양플라스틱 저감('22년까지 30%, '30년까지 50% 감축) 가속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**발생**(어구·부표, 하천유입)**-수거-처리 시스템 혁신**

○ **(디지털 전환·혁신산업 육성)** 해운·항만, 수산·어촌, 해양안전 등 **해양수산 全 분야**를 최대한 신속하게 **디지털 전환**

- **해양바이오·로봇** 등 혁신산업 육성 및 유망기업 성장 지원도 강화

□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구축

○ **(코로나 방역·지원)** 국가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여 해양수산 **분야별 방역관리**를 **강화**하고, 필요시 **관련업계 경영안정 신속 지원**

○ **(선박·수산물 안전)** 어선·연안선박의 사고 저감, 수산물 생산·유통 단계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**안전관리 시스템 혁신**

○ **(선원·어업인 지원) 선원 근로·복지, 어업인 의료복지** 지원 확대

☞ 해수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**'21년 예산 6조 1,628억원**을 바탕으로, **경기 반등 뒷받침**과 **해양수산 산업구조 전환** 추진

Ⅲ. 2021년 해양수산부 핵심 추진과제

《 2021 비전 》

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항해, 해양수산부가 이끌겠습니다.

굳건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부국 실현

3대 분야, 5대 추진전략, 12대 핵심과제

1. 경제를 뒷받침하는 해양수산

[1] 수출물류 지원 및 차질없는 해운재건

1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

2 해운재건 및 연관산업 혁신

[2] 수산·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

1 수산업 활력·지속가능성 확보

2 어촌과 연안의 균형발전

2. 지속가능한 선도형 해양수산

[3] 해양수산 탄소중립, 해양플라스틱 제로화

1 해양수산 탄소중립

2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

3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강화

[4]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, 혁신산업 성장 촉진

1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

2 혁신산업 육성 및 지원

3. 안전하고 따뜻한 해양수산

[5]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

1 코로나19 방역·지원 2 선박·수산물 안전관리 3 선원·어업인 지원

[1] 수출물류 지원, 차질없는 해운재건으로 경기 반등 뒷받침

1 개 요

□ (수출물류 지원) 수출 회복을 통한 **경기반등 뒷받침**을 위해 그간 해운재건 성과를 기반으로 **수출기업**의 **물류애로 해소 지원 강화**

□ (해운재건 이행) **국적선사 선복 및 서비스 혁신, 해양진흥공사 역할 강화, 해운인프라 확충** 등을 통해 해운선진국 도약기반 마련

< 향후 해운재건 목표 ('20~'25년은 추정치 및 목표치) >

<구 분>	'19	'20	'21	'22	'25
해운 매출액(조원)	37	36	40	42	51
원양 선복량(TEU)	50만	78만	105만	113만	120만
지배선대(DWT)	8,535만	9,030만	9,430만	9,672만	10,004만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1. 수출기업 물류애로 신속 해소

1 **선적공간 제공** 임시선박 투입, 중소화주 지원, '컨' 박스 수급 확대

○ (임시선박 투입) 수출물류 안정 시까지 주요 항로에 **국적선사**의 **임시선박**을 **매월 2척**(약 8,000TEU) 이상* 투입

* (미주항로) HMM, SM상선 월 2척 이상(선사별 1척 이상) 투입, (동남아항로) 고려해운 월 1척 이상 투입, (유럽항로) HMM 1척 이상 투입

- **항만시설사용료 감면**(최대 15%) **기간 연장**(~'20.12→~'21.6), **주요항로 수출 인센티브*** 제공으로 **국적·외국적 선사**의 임시선박 투입 **지원**

* '20.12~'21.2월 간 미주·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증가 시

○ (중소화주 특별지원) **중소·중견화주**에 **임시선박 선적공간**의 **50%**, **국적선사 신규 선복량 증가분**(긴급 화물수요 항로)의 **45%** 우선 제공

- **정기운항선박**의 **중소화주 전용물량**(주당 350TEU) **지원기간도 연장***

* (당초) '20.11~12월 → (연장) ~'21.2월(필요시 추가 연장)

○ ('컨' 박스 수급) 해운·무역협회 협업으로 **공(空) '컨' 박스 활용률 향상**, 해진공의 **'컨' 박스 장기 리스**('21.3, 40피트 4.3만대 등)로 **공급 안정화**

2 장기운송계약 지원 중소화주 장기계약 지원 및 우수 선화주 지원 강화

○ (중소화주 계약 지원) **중소화주연합체*** 구성·운영(중진공 지원) 등을 통해 **장기운송계약** 체결 시, **정시·긴급 선적, '컨' 박스** 등 **우선 지원**

* 중소화주들의 소량 수출화물을 집적하여 국적선사 선적공간 공동구매, 운임 협상력 확보

○ (우수 선화주 지원) **장기운송계약 활성화**를 위해 우수 선화주 **선정기준, 인센티브 등** 지원요건 **개선*** 추진

* 장기운송계약 배점 확대, 매출액 및 국적선사 이용률 등 지원요건 완화 등

3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 종합대응센터 운영 및 해운시장 질서 확립

○ (종합대응센터) 관계기관 합동 **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*** 운영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모니터링 및 지원, 물류애로 접수·조치 등 추진

* (참여) 해수부, 산업부, 중기부, 선주협회, HMM, 무역협회, 중진공, KOTRA
(운영) '20.12~'21.2 (필요시 연장) / 애로 등 접수(유선·누리집), 관계기관 실시간 협력·지원

○ (해운시장 질서 확립) **선-화주 간 및 선사 간 부당한 공동행위 등 근절**을 위한 **'해운시장 질서 확립방안*'** 마련('21.上)·추진

* 해운산업 특수성 및 「해운법」 규정(공동행위 인정), 他 국가 사례(美 연방해사위원회, 中 교통운수부, 日 국토교통성) 등을 고려, 심의위원회·전문조사기구 등 구성·운영방안 마련

2. 차질없는 해운재건 이행 및 인프라·연관산업 혁신

1 '컨' 선사 경영혁신 HMM 글로벌 경쟁력 확보, K-얼라이언스 결성 지원

○ (HMM) **1.6만 TEU급 초대형선 8척** 투입('21.上), **신조선 추가 발주**를 통해 컨테이너 선복량을 **'25년 112만TEU**까지 확대(現 71만TEU)

* 관계기관(산은, 해진공 등)과 협의하여 중장기 선복량 확대를 위한 신조프로그램 등 지원방안 마련

- 선대 확충과 연계한 **서비스항로 확대** 추진(미 동안, 지중해 등), 클라우드 기반 **차세대 물류시스템*** 도입('21~)을 통한 **對 화주서비스 개선**

* 계약, 선박 운항일정 및 선적공간 등 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최적의 화물운송 관리체계 구축

○ (K-얼라이언스) **동남아항로 국적선사 간** 효율적 선대 운영, 과잉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적 협력모델인 **'K-얼라이언스' 결성**('21.上) 지원

- **선대확충**(선박금융), **필수 영업자산**('컨' 박스 등) 확보 등을 지원하여 K-얼라이언스의 안정적 운영 및 동남아항로에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

2 해진공 역할 강화 한국형 선주사 도입 및 보증지원 범위 확대

○ (한국형 선주사) 선사의 선대 확보 및 용선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선박을 임대하는 **한국형 선주사** 도입·육성

- 우선, **해진공**에서 **운용리스**(BBC)* 방식을 **도입**하고, 한국형 **전문 선주사** 육성을 위한 **중장기 전략** 마련('21.上)

* 금융리스(BBC-HP, 기존 방식) :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의무 부여
⇔ 운용리스(BBC) : 리스기간 종료 후에도 리스사가 선박 보유(선박 매입의무 없음)

○ **(보증범위 확대)** 해운항만기업의 경영 안정, 장기운송계약 등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**신용보증, 계약이행보증** 등* 신규 지원('21.上)

* (해진공법 개정, '20.12) 기존 자산취득만 보증 → 신용대출, 계약입찰·이행 등에도 보증 허용

3 인프라 혁신 거점항만 개발·운영 효율화, 항만배후단지·해외거점 확충

○ (거점항만) 제4차 항만기본계획('20.12)에 따라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 예정인 **부산항 진해신항**은 예타 등 **사전절차** 이행('22년 기초조사 착수)

- **부산항·인천항·광양항**은 물류 효율화를 위해 **부두 증설** 등*을 가속화하고,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**운영 시스템**도 **혁신****

* ('21.上 착공) 부산신항 서'컨' 피더(1선석), 인천신항 '컨'(3) / (지속추진) 광양항 석유화학(2)
** (부산항·인천항)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('21.下) / (광양항) 2개사 운영체제 지원(시설 정비 등)

○ (항만배후단지) **인천항 전자상거래·콜드체인 특화구역** 활성화* 및 **특화구역 신규 지정**(부산·목포항 등), 주요항만의 **배후단지 확충****

* 인천항-공항 Sea&Air 연계, 공공·민간투자 확대 / ** 부산·광양·인천·평택항 436만㎡ 추가조성('21~)

○ (해외물류거점) **동남아·유럽** 주요항만*에 **해외공동물류센터** 확보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(현지사용료의 50~80%)

* (동남아) 인니 프로볼링고항('21.3월 개장) / (유럽) 로테르담항·바르셀로나항('21.9월 개장)

4 연관산업 지원 항만공간 입주 지원(유턴기업), 발전전략 마련(항만연관산업)

○ (유턴기업) 개정 「항만법」('20.12)에 따라, 유턴기업에 수출입 실적과 관계없이 **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** 및 **우선입주 지원***('21.上)

* (현행) 매출액 中 수출입액 20%(제조업)·5%(서비스업) 이상 → (개선) 유턴기업 우선입주 지원

○ (항만연관산업) **선박연료공급업, 선용품공급업, 항만용역업** 등의 경쟁력 향상 및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한 **종합발전전략** 마련('21.上)

[2] 수산·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 실현

1 개 요

□ (수산업 활력·성장) 온라인 중심의 **대규모 소비촉진** 및 **수출지원**, **수산식품산업 육성**으로 경제회복 기여 및 수산업 활력 제고

○ **연근해 수산자원관리, 친환경 양식 육성** 등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

□ (어촌·연안 균형발전) **수산공익직불제** 시행, **어촌·어항 재생개발**, **도서여객 지원** 등으로 어촌정주여건 혁신 및 귀어·귀촌 활성화

○ **항만재개발, 해양관광·문화 인프라**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1. 수산업 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 성장기반 강화

1 **소비·수출 촉진** **전방위 소비 촉진 및 수출 지원, 식품산업 육성 추진**

○ (소비 촉진) 수산물 **상생할인**(390억원)* 등 온라인 중심의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로 **2,500억원** 이상 **소비창출** 및 어가경영 지원

* (행사/할인율) 8회 이상(설·추석 특별전, 대한민국 동행세일, 코리아 수산페스타 등) / 20%
(사용처) 온라인 쇼핑몰, 전통시장, 대형마트, 생협, SSM 등(코로나 방역과 연계 추진)

-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**로컬푸드 직매장**에 **수산물 입점 확대**(20개소), **「수산물 유통법」 개정** 및 **수산물 유통협회 설립** 추진

○ (수출 지원) **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, K-씨푸드 전용관***(5개, 주요국 온라인몰) 등 비대면 지원 확대로 **25억불** 이상 수산식품 **수출** 추진

* (현행) 중국(타오바오) → (추가) 미국(아마존), 태국, 베트남, 아세안 거점국가

- **수산무역지원센터**(7개국 10개소)의 통관애로 등 해소, **국적선사의 선적 지원** 등 온·오프라인 연계 전방위 수출 지원

○ (식품산업 육성) 대규모 **수산식품클러스터** 조성(전남 착공, 부산 예타), 중·소규모 **수산식품거점단지** 2개소 추가 조성* 등 인프라 확충

* (~'20) 13개소 → ('21) 15개소(화성·태안 준공) → ('22) 19개소(화순·서천·해남·통영 준공)

- 간편기능식, 건강식 등 **맞춤형 수산식품 개발** 지원, 유망 **중소·중견 수산식품기업**에 **성장·고도화 바우처**(15개社, 年 각 1~2억원) 지원

2 **연근해 자원관리** **TAC 확대, 어선감척, 자원조성 등 수산자원관리 강화**

* AI옵서버, 전자어획보고시스템 등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과 연계 추진

○ (TAC 확대) TAC(총허용어획량 제도) **대상 어종·업종 확대*** 및 TAC 기반 **규제완화 시범사업**(1·2차)을 지속 추진하고, **TAC 관리기반도 강화****

* (대상) 15개 어종(시범어종 3개 포함), 14개 업종 → 확대 추진

** (인력) TAC 조사원 95→120명 / (조사선) 13척 운용, 4척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(~'26)

○ (어선감척 등) **연근해어선 210척**(근해 95, 연안 115) **감척, 금어기·금지체장 조정시행**('21.1, 14종) 관리, 민·관 협력 **불법어업 단속** 강화

○ (자원조성) **바다목장** 10개소, **산란·서식장** 14개소 등 자원조성기반 확대

○ (제도개선) TAC·어구 관리 및 상습·중대 불법어업 제재 강화를 위한 **수산관계법령 개정**, 어업갈등 해소를 위한 일부업종 **조업구역 조정**

3 **친환경 양식** **청정어장 재생, 배합사료 의무화, 부산물 재활용 등 추진**

* 친환경 부표 보급, 부표 저감·수거, 양식 스마트화 등과 연계 추진

○ (청정어장) 과밀·노후화된 **어장 4개소**('21~'25년 간 총 20개소)를 침적 폐기물 수거, 어장 재배치·조정 등을 통해 **청정어장**으로 **재생**

○ (배합사료) **친환경 배합사료 인증기준**을 마련*('21.上)하고, 배합사료 **공급 인프라 확충**** 및 배합사료의 **단계적 의무화** 추진

* 「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」 개정 / ** 배합사료 생산공장('21~'23, 생산능력 6천톤/년)

○ (부산물 재활용) 굴패각을 재활용하는 **발전소 탈황연료 생산시설 설치**(~'22) 및 **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**을 위한 **제도개선** 추진

○ (내수면어업) **친환경 양식단지**(2개소), **유휴저수지 자원화**(2개소) 등 조성

2.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 실현

1 **연안·어촌 정주여건 혁신** **공익직불제 시행, 어촌재생, 도서여객 등 지원**

○ (공익직불제) **수산자원 보호, 친환경 생산** 등 수산·어촌의 **공익가치** 향상, **어촌 유입·정착** 지원을 위한 **수산공익직불제**(4종)* **시행**('21.3)

* ('21년 지원규모) 조건불리 19,300어가, 경영이양 300명, 자원보호 1천척, 친환경생산 627어가

- 젊은 어업인 유입을 위한 **어촌계 가입자격 완화**('21.3, 「수협법령」 개정) 등 제도개선, 공익직불제 최초 시행에 따른 **면밀한 집행관리** 실시

○ (어촌·어항 재생) **어촌뉴딜 신규 60개소**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**신속 추진**하고, **기존 190개소**는 **조기 착공·준공**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

- 어촌·어항의 재생·개발 촉진을 위한 분야별 **중장기 전략*** 수립('21.下)

* 어촌·어항재생개발계획, 국가어항 통합개발계획,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등

○ (도서지역 지원) **국가보조항로·준공영제 항로**(총 42개)의 **공공성 제고** 및 **소외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지원***, **독도·무인도서 관리 강화** 추진

* 여객선·도선 미운항, 연육교 미개통 73개 도서에 보조항로 지정 및 지자체 지원 추진

○ (지원기반 고도화) 수산·어촌 지원 확대를 위해 **한국수산어촌공단** 설립(어촌어항공단 확대·개편) 및 **어촌정보 종합포털** 구축('21.12)

2 항만재개발 활성화 부산 북항 등 재개발, 공공성·사업성 확보 제도개선

○ (사업 실행) **부산 북항 1단계**는 '22년 준공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*, **인천 영종도**는 종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추진

* 기반시설 공정률 95% 달성, 해양문화·관광콘텐츠 확보(부산항기념관·해양레포츠센터 등)

- **광양 묘도, 거제 고현항***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, 부산 북항 2단계('22. 착공) 등 **신규 사업**은 절차 간소화, 사업자 선정 등 실행력 확보

* (묘도) 에너지허브(LNG·태양광·열병합 발전시설 등) 조성 / (고현) 상부시설 건설(1·2단계 부지) 등

○ (제도개선) 항만재개발 사업의 **공공성**(역사성·친환경성 등)과 **사업성**(국비지원 확대, 행정절차 축소) **향상**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3 해양관광·문화인프라 구축 치유·생태·레저·어촌관광 및 문화 인프라 확충

○ (치유·생태관광) **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** 조성* 및 해양치유 **콘텐츠·프로그램 개발****, 관련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**해양치유관리단** 출범

* 완도(~'21), 태안·울진·경남고성(~'23) / ** 다부처 해양·산림·농촌 치유기술개발('21~'25)

- **가로림만 해양정원** 조성 예타, **서남해안 갯벌·습지**의 **국제인증*** 추진

* (서남해안 갯벌)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/ (고창·서천군)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

○ (레저·어촌관광) **5대 권역 해양레저관광거점***, **어촌테마마을 10개소**** 및 **가족형 어촌체험관광지 4개소**('21, 시범사업) 조성 추진

* 시흥·군산·보성·서귀포·강원고성 / ** 기추진 7개소(영광·완도·고흥·경주 등) + 신규 3개소(공모)

○ (해양문화) 국립 **인천해양박물관, 미래해양과학관**(청주) 조성 추진(~'25)

* 국립해양박물관(부산), 국립해양생물자원관(서천), 국립해양과학관(울진) 기 운영 중

[3] 해양수산 탄소중립(Net-Zero)·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

1 개 요

□ (탄소중립) 선박·항만의 단계적 脫탄소화, 해양분야 탄소흡수원(CCS·갯벌·바다숲) 개발·확충, 차세대 해양에너지 기술 상용화 추진

○ 해양분야 기후변화(해수면·해수온 상승 등)에 대한 관측·예측 고도화, 연안·항만과 해양수산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추진

□ (플라스틱 제로화) 해양(어구·부표)·육상(하천유입) 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, 수거·처리·재활용 시스템, 민·관 거버넌스 등 관리체계 전반 혁신

□ (국제협력) P4G 정상회의('21.5) 등 계기 해양수산 脫탄소·플라스틱 협력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1. 해양수산 탄소중립 기반 구축

1 **선박·항만 탈탄소화** 저탄소 선박 보급 및 무탄소 기술개발, 항만 친환경화

○ (친환경 선박) '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*를 위해 기술개발·보급 및 국제표준화 추진(산업부 협업)

* (저탄소 선박) **LNG, 하이브리드** 등 → (무탄소 선박) **수소, 암모니아** 등

《 **선박 무탄소화 추진 로드맵** ('20.12, 2030 그린쉽-K 추진전략) 》

준비기('21~'30)		이행기('31~'40)		성숙기('41~'50)
저탄소 선박 보급 확산 및 글로벌 시장 선점,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	⇒	저탄소 선박 시장 주도, 무탄소 선박 상용화 시작 및 초기시장 선점	⇒	저탄소 선박 쇠퇴, 무탄소 선박 완전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주도

- (보급 촉진) 관공선 15척, 민간선박 16척(외항선 13척, 내항선 3척)*을 저탄소 선박으로 건조, 공공부문 건조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

* ('30년 목표) 관공선 388척(199척 건조, 189척 DPF 장착), 민간선박 140척(건조) 친환경 전환 (민간 지원) 친환경선박 보조금(10~20%), 해진공 보증 지원 및 뉴딜펀드 연계지원 검토

- (기술·인프라 개발)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*(~'25), 무탄소 선박기술 신규 개발** 예타 및 LNG벙커링 전용선 개발·건조(~'22, 2척) 추진

* LNG·암모니아 혼합연료, 전기복합어선 등 / ** 수소·암모니아 핵심기술, 시험기반, 시범선 등

- (인증·표준화) 국가인증제도(지원 연계), 국제표준화 추진단(산·학·연) 운영

○ (친환경 항만) 주요 항만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* 하고, 무탄소 항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('21.12)

* (울산) 신규 벙커링 터미널 건설('20~'24) / (부산) 지역과 협의하여 민자유치 추진 (광양·인천·평택 등) LNG 인수기지 시설 보완 추진(~'30)

- 선박연료유 황함유량(3.5% → 0.5%) 기준 적용(외+내항선) · 저유황유 유류세 지원 (보조 65% + 감면 15%) 강화,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확대(YT + TC·SC 등) 추진

2 탄소흡수원 개발·확충 CCS 적지·기술 확보, 블루카본(갯벌·바다숲) 확대

○ (CCS) 대규모 실증·상용화를 위한 해양저장소를 확보하고, CO_2 누출 대비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제도적 기반 보완('21~'23)

○ (블루카본*) 갯벌 복원지역을 확대(기존 6개소, 추가 3개소)하여 '25년까지 4.5㎢ 복원, 바다숲도 2,386ha 추가 조성(누적 약 2.6만ha)

* 갯벌 및 해양생태계(잘피 등)가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

- 블루카본의 체계적·종합 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('21.下)

3 청정에너지 개발 조류·파력·온도차발전, 해양바이오수소 기술 상용화

○ (해양에너지) 조류·파력·해수온도차 등 해양에너지 상용화·고도화 기술개발 및 실증*, 해양에너지 발전 로드맵 수립('21.9)

* (조류) 100㎾급 발전플랜트 개발 및 도서전력 공급(전남), 실해역 시험장(부산·진도) 조성(~'22)
(파력) 방파제 연계 30㎾급 발전플랜트 개발 및 시험운영('21, 제주)
(해수온도차) 1㎿급 국외 실증을 위한 키리바시 육상실험기반 구축('21~'22)

○ (해양바이오수소) 해양미생물 활용 수소 생산플랜트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수소정제(50→99.8%), 공정제어 및 운영최적화 시스템 개발('21~'23)

4 기후변화 관측·예측 해양·극지 분야별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역량 강화

○ (해양) 조사선·인공위성·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하여 분야별(해수면·해수온·연안침식·수산자원·해양생태계 등) 관측 및 정보제공 강화

- 빅데이터 기반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*, 중장기 시나리오 전망 고도화

* 해양기후변화 지수모델 개발, 북서태평양 해양-대기 상호작용 연구,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, 해양생태계 변동성 규명 및 예측모델 개발, 연안침식 예측모델 개발 등

○ (극지) 환경변화(빙권·온도 등) 및 기후변화 영향 연구 확대, 극지역량 강화를 위한 「극지활동법」 제정,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(예타) 추진

5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연안·항만 정비, 수산업·해양생태계 관리 강화

○ (연안·항만) **66개 연안 취약지구 정비**(국가 19개, 지자체 47개), **연안재해 위험평가*** 시행('21.2) 및 취약지구에 대한 **국가정비 사업기준 개선**

* 연안지역의 배후 취약성, 재해가능성 등을 조사·평가하고, 취약지구 저감대책 마련

- 기후재해 대비 **항만시설 설계기준*** 및 **정비계획**의 **재해대응력 강화**

* (현행) 50년 빈도 재해대응 → (개선) 100년 빈도 재해대응, 신뢰성 설계법 도입 등

○ (수산업) **고수온 내성어종** 개발, 재해취약 **양식장 재배치** 및 **재해대응장비** 보급*, **양식재해보험 가입 확대**** 및 **입식신고율 제고** 추진

* (재배치) 경남권 연안어장('21) 등, (장비) 액화산소공급기 등 / ** 보급형 상품(가입금액↓) 개발 등

○ (해양생태계) **해양생태축*** 설정·관리, **해양생물종복원센터**** 설립 추진

* 기후변화관찰축, 연안습지보전축 등 5개 / ** 멸종위기 해양생물 증식·복원 등

2.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시스템 확립

1 발생원 저감 해양기인(어구·부표)·육상기인(하천유입) 쓰레기 발생 저감

○ (해양기인 쓰레기) **친환경 부표**(스티로폼 부표 대체) **571만개, 친환경 어구**(생분해성) **400척 등 보급 촉진*** 및 **단계적 사용 의무화**** 추진

* 보조금 지급, 성능개선, 어업인 의견수렴·홍보 강화 / ** 「수산업법」·「어장관리법령」 개정

- 어업인의 어구·부표 회수 확대를 위해, **어구·부표 보증금제, 어구 실명제*·일제회수제 법제화**** 및 항·포구 **집하장 확충**(50→80개소)

* 전자어구관리시스템 개발(~'22년)과 연계 추진 / ** 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·「수산업법」 개정

- 어구·부표 사용 저감 등을 위해, **어구·부표 감축어법*** 보급 및 **바이오플라스틱 어구·부표** 개발 추진(다부처 脫플라스틱 R&D 예타)

* 개체굴 양식(고부가가치·소량 생산 → 부표 감축), 현수교 방식(대형부표 활용 → 소형부표 감축) 등

○ (육상기인 쓰레기) 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**하천관리청**(환경부·지자체·공공기관)의 **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조치*** 실행 협조

* (평시) 하구둑 등(낙동강·금강·영산강), 본류·앞바다(한강) / (여름철) 지류·지천 등 집중 차단·수거

- 환경부·수협 등 협조를 통해 **1회용품 등에 플라스틱 사용 규제***를 **확대·강화**하고, **수산물 친환경 포장기술 개발**('21~'24) 신규 추진

* 플라스틱 1회용품 금지(비닐봉지·포장재 등), 생활제품(화장품·의약외품 등)에 미세플라스틱 금지

2 **수거·처리·재활용 강화** **수거 인프라 확대·스마트화 및 처리·재활용 촉진**

○ (수거 확대) **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7척 건조** 완료, **침적쓰레기 수거 확대**(年 3~4천→6천톤) 및 **바다환경지킴이**(年 1천명) 활동 지원

- 드론 활용,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**해양쓰레기 분포도** 수립, **해안쓰레기·미세플라스틱 수거장비** 개발 등 **수거체계 스마트화**

○ (처리·재활용 촉진) 해양쓰레기의 염분 등을 제거하는 **前처리시설 2개소** 확충(~'22, 환경부), 해양쓰레기 **에너지화 시스템** 개발(~'24)

- 폐부표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**압축기 보급**(現 27대 + 매년 2대), **생산자책임 재활용**(품목·의무율↑, 환경부 협조) 및 **업사이클링** 확대

3 **민·관 거버넌스 확립** **국민참여 확대 및 범부처 협력시스템 구축**

○ (국민참여) **해양쓰레기 신고앱** 운영 개시, 반려해변·바다문화제 등 **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**의 **전국 확산 지원**(참여플랫폼 구축 등)

- 전국 4대 권역에 **해양환경 이동교실** 운영(권역별 차량 1대), **온라인 해양환경교육 플랫폼** 구축,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**범국민 캠페인** 추진

○ (부처협력)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, 해양쓰레기 국제논의 대응 등을 위한 범부처 **해양폐기물위원회** 설치·운영(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 개정)

3.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강화

1 **P4G 정상회의** **친환경 선박, 해양쓰레기** 글로벌 협력(외교부 협조)

○ (친환경 선박) **탄소배출제로연대***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해운분야 탄소중립 선도 메시지 전달, 친환경 선박 보급 확산 공감대 형성

* '30년 무탄소 선박의 상업적 항행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(우리부·HMM·대조양·KOMSA 등 가입)

○ (해양쓰레기) **유엔환경계획**(UNEP)과 함께 해양쓰레기 국제협약 수립 이니셔티브 확보, 민관협력 파트너십 증진 등 추진

2 **국제기구·ODA** **탈탄소·플라스틱 관련 국제기구 및 ODA 협력 강화**

○ (국제기구) IMO(국제해사기구)(친환경 선박), NOWPAP(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)·COBSEA(동아시아해조정기구)(해양쓰레기) 등 논의 주도

○ (ODA) **신남방국가*** 중심으로 해양 온실가스 감축, 해양쓰레기 등 협력

*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, 해양쓰레기 처리 필요성이 높아 ODA 등 협력 강화 필요

[4]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과 혁신산업 성장 촉진

1 개 요

□ (디지털 전환) **해운·항만, 수산·어촌** 全 분야의 **디지털·비대면 전환**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효율성 향상,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화

○ **스마트 해상안전시스템** 운영 및 고도화로 해상교통 안전성 향상, **해양수산 빅데이터** 플랫폼 구축 및 공공·민간 활용 활성화

□ (혁신산업 육성) **해양바이오, 해양로봇·장비·모빌리티** 등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, 유망 벤처기업·신기술에 전주기 **창업투자·R&D 지원 강화**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1. 디지털 융합 기반의 해양수산업 전면 혁신

1 **해운·항만** **자율운항선박, 스마트항만 및 스마트물류시스템** 구축

○ (자율운항선박) 자율운항기술, 육상제어시스템 등 **핵심기술** 개발, **시뮬레이션** 및 **실해역 실증** 등 상용화 **기반 마련**(~'25, 산업부 공동)

* ('21) 시뮬레이션 → ('22) 소형시험선 → ('24~'25) 실해역 실선 테스트

-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**스마트항만 연계기술 개발**, IMO 규범화 주도를 위한 범부처 **규제혁신로드맵** 마련('21.6)

○ (스마트항만) 한국형 **'컨' 자동하역시스템**(~'23) 및 **자율주행차 전용 자동하역시스템**('21~'27) 개발, **광양항 항만자동화 Test-Bed** 예타 추진

- 29개 무역항의 **디지털 시설물 관리 추진전략**(ISP) 수립, **5G 기반 지능형 항만 기술개발·실증**, 스마트항만 **전문인력 교육** 실시(200명)

○ (스마트물류) 인천항·부산항 **스마트공동물류센터*** 조성 추진, **부산항 블록체인 플랫폼**('컨' 반출입 배차시스템 등) **고도화** 및 **인천항**에 **도입**

* (인천항) 설계·착공('21) → 완공('23) / (부산항) 기본계획 수립('21) → 설계·공사('22~'24)

- 공공·민간 **수출입 물류데이터**의 통합관리·공유 **디지털 플랫폼** 구축, **냉장·냉동 '컨' 원격제어 장비·솔루션** 지원 및 **스마트'컨'** 개발('21~'24)

2 수산·어촌 생산, 유통, 가공, 어촌 全 분야의 디지털·스마트 전환

○ (스마트양식) 대규모 스마트양식 **클러스터 5개소** 및 **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2개소*** 조성 추진, **중소 양식어가**에 **스마트시설 보급**(年 10개소)

* (클러스터) 기추진 3개소(부산·고성·신안) + 신규 2개소 / (내수면) 기추진 1개소(괴산) + 신규 1개소

- 스마트양식 **표준화전략** 수립 및 **데이터 플랫폼** 구축(~'22) 추진

○ (스마트어업관리) **연근해 AI 옵서버** 개발·시범운영(80척), **전자어획 보고시스템** 운영 확대*, **육-해-공 불법어업 통합감시체계**** 구축(~'22)

* (현행) 선망, 안강망, 저인망 등에 시범운영 → (확대) 타 업종에 운영 확대
** (해상) V-Pass, VMS 통신망 등 - (육상) 항포구 CCTV, 드론 - (항공) 중형무인기

- **원양** 참치연승어선에 **전자모니터링시스템**(EM) 시범운영(WWF(세계자연기금) 협조)

○ (스마트유통·가공) **스마트 신선유통 표준화** R&D*('21~'25), **AI 기반 콜드체인**(산지-소비지) **구축전략** 및 **온라인 거래지원 포털**** ISP 수립

* 신선유통 표준지표, 위판장 3.0 표준모델 등 / ** 온라인 주문·배송·고객·재고관리 솔루션 제공

- 수산식품 **스마트가공** R&D*('21~'25) 및 **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고도화**

* 수산식품 가공 핵심공정 자동화, 스마트 품질검사 및 공정제어 시스템 등 개발

○ (스마트어촌·어항) ICT 기반 비대면 의료돌봄서비스 등 **스마트 어촌 시범사업**(1개소, 과기부 협업) 및 **어촌 스마트화 추진방안** 수립

- **도서지역 국가어항**(3개소, 동·서·남해)에 **스마트 관리시스템** 구축('21~'23)

3 해상안전·빅데이터 바다내비 운영 개시, 항법 고도화,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
○ (스마트해상안전) 충돌·접촉예방, 최적항로 등을 제공하는 **바다 내비게이션**(e-Nav) **서비스***를 개시하고, **원격 선박검사 제도화**** 추진

* 3톤 이상 선박 5,950척에 단말기 보급, 3톤 미만 어선에 전용 앱 등 개발·배포 병행
** '20년 임시시행 성과분석, 제도 재설계(용역)를 거쳐 법제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

- 항법정보(GPS·PNT) 정확도 개선 및 **차세대 지상파항법시스템**(eLoran) 시범운용(서해북부), **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** 신규개발(다부처 예타) 추진

○ (빅데이터 플랫폼) 분야별 해양수산 공공데이터(770종) 수집·연계*로 AI 분석·활용이 가능한 **빅데이터 플랫폼** 및 **해양공간지도** 구축(~'22)

* 공공데이터 수집·연계 계획 : ('18~'20) 405종 → ('21) 200종 → ('22) 165종

2. 해양바이오 등 혁신산업 육성 및 지원시스템 강화

1 해양바이오 유용 소재 정보제공·발굴, 인프라 확충 및 전문교육 확대

○ (소재정보·발굴) 해양수산생명자원소재 **4천여 종**의 **효능 정보** 등을 **고도화***하여 **해양바이오뱅크**를 통해 산업·연구계에 **제공**('21~'25)

* 항암, 항바이러스, 항산화, 항균 등 소재별 효능 정보를 기초로 등급화

- 해양수산생명자원 기반 **항바이러스 대응소재**(20종) 발굴, **해양바이러스 DB**(500종) 구축 및 **제어기술** 개발('21~'26) 추진

○ (인프라·교육) 해양바이오 **산업화 인큐베이터**(~'23, 서천), **해조류 바이오소재 대량생산시설**(~'23, 완도) 등 인프라 확충

- **전문인력 교육**(年 2회), 식품용 **인허가·실험설계 컨설팅**(식약처 협업) 지원

2 해양로봇·모빌리티 해양로봇·장비 등 개발·활용 지원 및 로드맵 수립

○ (해양로봇·장비) **수중건설로봇 상용화**를 위한 **특수건설기계 등록** 추진(국토부 협조), **극한지 무인이동로봇** 시스템 개발('21~'25, 과기·산업부 공동)

- 업계 국산화 수요가 높은 **핵심 장비·기술***의 **국산화 개발** 지원('21~'26, 13종), 드론 등 **무인장비**를 활용한 **선박검사 지침** 마련

* 자동조타장치, 레이더, LNG탱크, 시뮬레이터, 자이로컴퍼스 등

○ (해양모빌리티) 공중·수상·수중에서 이용가능한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**첨단해양교통**(AOM) **로드맵** 수립('21.下)

3 창업·투자·R&D 지원 유망기업 발굴-육성-투자 전주기 지원 강화

○ (발굴) **창업 콘테스트, 리빙랩 R&D 기획***, **도전형 R&D**(O-ARPA)** 등을 통해 **디지털·비대면·신산업** 창업아이템 및 유망기업 적극 발굴

* 최종 사용자(산업계·국민)가 기획 참여 / ** 現 기술로 극복이 어려운 과제 등 대상

○ (육성) 창업 **엑셀러레이터** 및 **스케일업 지원, 창업투자지원센터**(6개소)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

○ (투자) **해양·수산모태펀드***, **크라우드펀딩 유치 지원, 사업화자금 지원**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사업화 투자지원 확대

* ('20년 누적) 총 2,623억원(17개 자펀드) → ('21년 신규) 393억원(3개 자펀드) 추가

[5]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

1 개 요

□ (코로나 방역·지원) 항만·선원, 해수욕장 등 **분야별 방역관리**를 **강화**하고, 필요시 해양수산업계에 **경영자금, 적극행정** 등 신속 지원

□ (선박·수산물 안전) 선박사고 **취약선박 집중관리**, 어선·연안선박의 사고예방 및 저감을 위한 **장비보급, 선박 현대화** 등 집중 추진

○ **수산물 생산·유통 全주기**에 걸쳐 수산생물질병·항생제·방사능(생산단계), 원산지·이력제(유통단계) 등의 **위생안전 관리체계 개편**

□ (선원·어업인 지원) **선원 근로·복지체계 개선, 어업인 의료복지** 지원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1.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업계지원

1 **방역 관리** **항만·선원, 해수욕장 등 분야별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**

○ (항만·선원) **항만방역 관계기관*** **협력 강화**(핫라인 개설 등), 방역관리 기반의 원활한 **선원교대**** 및 **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**(5개소) 지원

* 해수부(지방해수청), 질병관리청(검역소), 관세청(세관), 법무부(출입국관리소), 항만공사 등

** 선원 격리면제 대상선종 보완(기항없이 항해한 여객선·화물선 등, 질병관리청 협조) 등

○ (해수욕장) **혼잡도 신호등, 사전예약제** 등 방역시스템·매뉴얼 보완, 한적한 해수욕장 홍보 강화로 **2년 연속 감염 제로 해수욕장** 실현

○ (기타시설) 해양수산 분야 **주요 시설***의 **방역관리**를 강화하고, **교육·홍보·전시·검사** 등의 **비대면·온라인화** 지속 확대

* 유통·물류시설(도매시장·위판장 등), 문화·교육시설(해양박물관·연수원 등), 관광시설 등

2 **업계 지원** **해양수산업계 경영안정 지원, 재정집행·적극행정 신속 추진**

○ (경영지원) 해양수산업계의 **시장·경영현황**을 면밀히 **모니터링**하고, 필요시 **긴급경영자금, 정책금융, 사용료 감면**(국·공유시설) 등 **적시 지원**

○ (재정집행·적극행정) **'21년 예산**(본부·지방청·공공기관)을 최대한 신속히 **집행**하고, 국민·관련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**적극행정**도 과감하게 추진

2. 선박 안전 및 수산물 위생안전 시스템 혁신

1 선박 안전 선박·통항로 검사, 어선·연안선박 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

○ (선박·통항로 검사) 사고이력 등이 있는 **취약선박 800척**(어선 450척, 연안선박 350척) **집중 안전점검***, 부선은 공사용 시설물 안전검사 등 실시

* (어선) KOMSA 지정검사원(1인 3척) 관리·지원 / (연안선박) 선박 검사주기 강화(2→1년) 등

- **해상교통안전진단**(해양개발행위) 실효성 확보를 위해 **사전컨설팅**을 도입하고, **통항로 안전성 평가대상 항만도 확대**(무역항+연안항)

○ (어선사고 예방) **화재경보·조난발신장치** 설치 **의무화** 및 **화재경보·소화통합장비** 개발('21.上), **원거리 어선 위치발신기** 보급('21~'23, 2천대)

-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의 **항해당직 이행** 계도·홍보 강화, 조타실 시야 확대가 가능한 **어선장비통합** 기술개발(~'22, 통신·항해·조업) 추진

- **안전·복지형** 연근해어선 **표준선형 보급·확대***, 안전한 어선 건조를 위한 **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** 및 **진흥단지 구축**(연구용역) 추진

* (현행) 근해 3개(권현망·쌍끌이·선망) → (확대) 근해 21개+연안업종(5종) 표준선형 개발

○ (연안선박 안전) **연안여객선**은 **운항상황**을 실시간 **모니터링**(KOMSA 상황실, 도서 CCTV)하고, **선사부담 완화**(10~20→10%)로 **현대화펀드** 활성화

- **연안화물선**은 부실 사업자(무실적 등) 제로화를 위한 **등록취소제** 시행 및 **노후선박 감축**을 위한 교체연령 등 **개선방안 마련**('21.下)

○ (안전문화 확산) **해양안전체험관**('21.3, 안산) · **국민해양안전관**('21.7, 진도) 개관 등 **안전교육·홍보 확대**, 선사 **안전투자 공시제 단계적 도입** 추진

2 수산물 위생안전 생산(질병·위해요소) · 유통(원산지·이력 등) 단계별 관리 강화

○ (생산단계) **수산질병관리 강화**를 위해 **검·방역** 업무를 **일원화***('21.3~) 하고, **주요 생산해역**에 **하수처리시설** 확충(1→11개소**, 환경부 협조)

* 수산과학원·수산물품질관리원 관련업무 통합·일원화 / ** '25년까지 71개소 확충 추진

- **양식장 안전성 조사**(年 14.5→15천건) · **HACCP 등록**(267→300개소) **확대**, PLS* 도입 대비 **잔류물질 실태조사**('21~'24)로 위해요소 관리 강화

* 허용물질목록관리 : 사용허가물질(약품 등)은 잔류허용기준, 그 외 물질은 일률기준 관리

-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**동·남해** 해역 등의 **방사성물질 조사***, **주요 수산물**의 **생산단계 방사능 안전검사****를 철저히 실시(필요시 확대)

* 주요 조사정점의 조사주기 단축(年 4→6회) 등 / ** 다소비 어종 40개 등 2,400건 실시

○ (유통단계) 수입량과 소비자 민감도 등이 높은 품목에 대해 **원산지 집중 단속**을 실시하고, **유통이력 의무신고대상**도 **확대***

* (원산지) 10대 품목(명태·가리비·참돔·방어 등) 집중단속 / (유통이력) 의무신고대상 17→25개

- **명예감시원**(800명, 소비자단체 등) **활성화, 신고포상금 상향** 등 원산지 국민감시를 강화하고, **원산지 판별기술·장비** 신규 개발*(~'23) 추진

* 유전자·이화학분석 등을 활용한 원산지 판별기술(11개 품종), 휴대용 키트(20개 품종) 개발

- **청정위판장, 노후위판장 저온유통시설 지원, 산지거점유통센터**(FPC) 등 친환경 유통시설 조성 확대 추진(18→21개소)

3. 선원 및 어업인 근로·복지 지원 강화

1 선원 근로·복지 어선원 관리 일원화, 선원 복지제도·인프라 개선

○ (어선원 관리) **어선원 안전·근로** 향상을 위해, **이원화**(해수부(20톤이상)·고용부(20톤미만))된 **관리업무**를 해수부로 **일원화** 추진(선주·선원단체 협의 → 선원법 개정)

- **외국인 어선원** 권익보호를 위한 **송출·입 관리제도 개선*** 시행 추진

* 송출·입 전담기관(공공기관) 선정, 주요 송출국 합의(인니 등 MOU), 근로감독 강화 등

○ (선원 복지) 직무외 부상·질병에 대한 **상병보상액 상향**(최저임금 이상, 선원법 개정) 및 장해어선원 **의료재활급여 법정화**(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)

- **선원복지회관**(26→27개소) · **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**(6→7개소) 확충 및 **원양선원 원격의료지원** 확대(100→120척), 선원 **유급휴가제 개선** 추진

2 어업인 복지 어업인 연금·재해보험 및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

○ (보험 지원) 어업인 **국민연금 지원 확대***(인원·금액) 시행, **어선재해 보험료 환급 확대**(무사고 환급 도입, 휴항·휴어 환급 확대) 추진

* (국민연금) 지원인원 13,053 → 13,319명 / 월 최대 지원금액 43,650 → 45,000원

○ (의료 지원) **낙도·낙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**(年 755→830명) · **어업인 안전쉼터**(68→73개소) 확대, **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** 도입 추진(법령 개정)

Ⅳ. 2021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5대 추진전략	'21년 주요 핵심과제 추진계획
1 수출물류 지원, 차질 없는 해운재건 추진	▸ 주요항로에 국적선사 임시선박 투입 및 중소·중견기업에 선적공간 우선 제공, 중소화주연합체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및 우수선화주 제도 개선 추진 ▸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및 '해운 공정거래 질서 확립방안' 마련 ▸ 1.6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투입 및 'K-얼라이언스' 결성 지원, 운용리스(BBC) 방식의 '한국형 선주사' 도입 및 해진공 신용보증 등 신규 지원 ▸ 부산신항 등 거점항 부두 증설, 항만배후단지 확충,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보 ▸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지원 및 '항만연관산업 종합발전전략' 마련
2 수산・어촌의 활력 회복과 연안경제권의 균형발전	▸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(총 390억원),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「수산물 유통법」 개정, 수산식품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및 K-씨푸드 전용관 구축·운영 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(전남·부산) 및 중·소규모 수산식품거점단지(2개소) 추가 조성 ▸ TAC 관리대상 어종·업종 확대, 연근해어선 210척 감척 및 금어기·금지체장 조정 시행, 과밀-노후어장의 청정어장 재생(4개소) 및 친환경 배합사료 인증기준 마련 ▸ 수산공익직불제 시행, 어촌뉴딜 신규 60개소 착수 및 기존 190개소 조기 추진, 「어촌재생 특별법」 제정 및 '한국수산어촌공단' 설립 추진 ▸ 4대 권역 해양치유센터 및 가족형 어촌체험관광지(4개소) 등 해양레저·문화 인프라 조성
3 해양수산 탄소중립, 플라스틱 제로화	▸ 친환경 선박 공공·민간 보급 촉진, 기술·인프라 개발, 국가인증제 및 표준화 추진, 무탄소 항만구현 중장기 전략 수립, 저유황유 유류세 지원 확대 ▸ CCS 상용화를 위한 해양저장소 확보, 갯벌 복원(9개소), 바다숲 추가 조성(2,386ha), 해양에너지 발전 로드맵 수립, 해양바이오수소 시스템 개발, 「극지활동법」 제정 추진 ▸ 66개 연안 취약지구 정비, 재해취약 양식장 재배치 및 재해대응장비 보급, 양식장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재난복구비 현실화 추진 ▸ 친환경 부표(571만개)·어구(400척) 보급, 어구·부표 보증금제, 어구실명제/일제회수제 법제화,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지원,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(반려해변 등) 전국확산 ▸ 탈탄소·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(P4G)-국제기구(IMO 등) 및 ODA 협력 강화
4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, 혁신산업 성장 촉진	▸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범부처 규제혁신로드맵 수립, 한국형 '컨' 하역시스템 개발,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추진(부산-인천), 블록체인 플랫폼 고도화 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(5개소) 및 내수면 스마트양식장(2개소) 조성 추진, 연근해 AI 옵서버 개발, 스마트 신선유통 표준화 기술개발(~'25), 불법어업 육-해-공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▸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시, 해양수산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해양공간지도 구축 ▸ 해양생명자원 조사·확보 범위 확대,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및 해조류 바이오소재 대량생산시설 확충, 첨단 해양교통 로드맵 수립 ▸ 창업콘테스트, 도전형 R&D, 창업엑셀러레이터·스케일업 지원, 해양수산펀드 지원
5 해양수산분야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기반 정착	▸ 코로나19 대응 항만방역 관계기관 협력 강화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(5개소) 운영 및 지원,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및 사전예약제 등 방역시스템 고도화 ▸ 사고이력 선박 집중 점검(800척), 어선 화재경보·조난발신장치 의무화 및 위치발신기 보급, 연안여객선 운항상황 실시간 모니터링, 해양안전체험관 준공(안산-진도) ▸ 수산질병관리 검·방역 일원화, 주요 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확충, 해양환경/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안전검사, 원산지 단속 및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 확대 ▸ 어선원 안전·근로 감독업무 일원화, 선원 직무외 부상·질병 상병보상액 상향, 장애어선원 의료재활급여 법정화, 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및 소형어선 어선재해보험 환급 확대

붙임	4년간 성과/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

≪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≫

○ 화장품 스타트업의 청년 대표인 20대 A씨는 '17년 창업 이후 미국, 영국, 독일 등 50개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며 차세대 수출리더로 발돋움하고 있다. '20년 하반기 미주노선 운임 급등 및 화물수출 수요증가로 인해, A씨는 미국에 수출할 화물 선적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 바이어와 추가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있었다. 이 상황에서 국적선사 HMM은 해수부-중기부 간 업무협약에 따라 기존 정기운항선박과 임시선박의 중소수출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A씨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였다. 정부와 HMM의 수출물류 지원으로 A씨는 수출화물을 예정대로 선적하고, 해외 바이어와 추가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었다.

○ 충남 보령에서 근해안강망업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50대 B씨는 '19년까지는 어업소득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, '20년부터는 어업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세제혜택이 작았었지만, 농어업 형평성을 위해 「소득세법」이 개정되어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이다. B씨는 "줄어든 세 부담이 어려운 어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○ 충북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'20년 8월 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전남지역의 해수욕장을 갈 계획을 세웠었지만,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. 바로 자신과 같은 여행객이 많이 몰려들어 오히려 해수욕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. 다행히 정부가 통신사와 함께 운영하는 '혼잡신호등'을 통해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었고, 전라남도의 '사전예약제'를 활용하여 다른 여행객과 거리를 두고, 발열검사 등을 거쳐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었다. C씨는 해수욕장에서 끊임없이 틀어주던 '2미터 사랑' 노래를 요즘도 흥얼거리곤 한다.

≪ '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≫

○ '삼시세끼'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 만재도 주민들은 그동안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여객선을 타고 만재도 근처까지 와서 바다에서 작은 배(종선)로 옮겨 타야만 했다. '어촌뉴딜' 사업으로 여객선 접안시설이 개선되면서 이제 만재도 주민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위험하게 배를 갈아타지 않고도 바로 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. 그동안 목포에서 만재도까지 5시간 40분이 걸렸던 뱃길은 접안시설 개선 후 직항노선이 생기면서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되면서 일일생활권이 되었다. 여객선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종선을 대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40대 어촌계장 D씨는 "내 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"며 기뻐했다.

○ 평소 수산물 반찬을 즐겨먹는 유치원생 아이를 둔 서울거주 40대 엄마 E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'수산물 상생할인'과 '수산공익직불제'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. 공익직불제를 지원받는 어업인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상생할인을 통해 20%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앞으로 공익직불제가 적용되는 수산물도 확대된다고 하니, E씨는 맛좋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을 아이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 안심이 된다.